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1. 상법상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⑤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상법상 상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화자간의 상행위에 관한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 ③ 상인이 그 영업에 관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상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 ⑤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상법 제58조의 일반상사유치권과 상법상 특별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상사유치권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 ② 일반상사유치권의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 ③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반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그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④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 ⑤ 대리상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

4.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권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 ②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위법하게 대여한 경우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③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대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아니면 명의차용자가 상인이라 하더라도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5. 상법상 중개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②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③ 중개인은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각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중개인은 계약서 교부의무에 관한 상법상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 ⑤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6.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②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은 위탁자의 채권자와 위탁매매인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
- ③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다면,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④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염가로 매도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이 그 차액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⑤ 위탁매매인이 개입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 7. 상법상 창고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② 창고증권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⑤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 당사자가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창고업자는 창고증권을 발행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이를 반환할 수 있다.

## 8. 상법상 금융리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본다.
- ③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이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금융리스물건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금융리스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금융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금융리스이용자에 대하여 잔존 금융리스료 상당액의 일시 지급 또는 금융리스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금융리스이용자는 공급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가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②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이사회가 결정한다.
- ③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A회사의 자회사인 C회사가 D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D회사는 상법의 적용에 있어 A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⑤ A회사가 E회사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E회사의 모회사가 되었다면, 주식의 교환 전에 E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A회사의 주식은 교환 즉시 소멸된다.

## 10.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원의 책임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 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②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1인 사원만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 ③ 회사 성립 후에 업무집행자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의 절차가 필요하다.
- ④ 회사를 대표하는 업무집행자가 그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회사는 그 업무집행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회사가 잉여금을 한도로 하여 분배할 수 있다는 상법 규정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분배한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자는 그 잉여금을 분배받은 자에 대하여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11.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발기인의 의결권은 1인에 대하여 1개로 한다.
- ② 발기인이 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한 다음 회사가 성립하면 즉시 납입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가장납입을 한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있다.
- ③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발기인의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전환주식은 발행할 수 없다.
- ④ 회사 설립무효는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된다.
- ⑤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12. 상법상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정관이나 상환주식인수계약 등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권자인 주주가 상환권을 행사하였다면,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지 않더라도 그 행사시점에 주주의 지위를 상실한다.
-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③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상장회사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 ④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을 분할할 수 있다.
- ⑤ 비상장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3.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식회사는 합병회사의 사원이 되지 못한다.
- ② 합자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③ 법원은 유한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④ 존립중의 유한회사가 합병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 ⑤ 합병회사의 사원이 회사 채무에 관하여 변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그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권리가 있다라도 그 사원은 그 변제를 거부할 수 없다.

14.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 전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 주권을 상실한 자는 공시최고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채권관결을 얻지 아니하였어도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회사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ㄹ.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지만,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질권이 성립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5. 상법상 주권을 발행한 비상장회사의 주주명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② 주식을 취득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하고 있는 주권의 제시 등의 방법으로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단독으로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주주명부에 전자우편주소를 적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 내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볼 수 있다.
- ⑤ 주식양수인이 명의개서를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청구자가 진정한 주주인가에 대하여 실질적인 자격 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16. 상법상 합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② 유한책임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③ 회사의 지배인 선임과 해임은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④ 회사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 ⑤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17.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하여 의사정족수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결의 요건을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의하여 의사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② 보통결의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가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④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가 양도회사 영업의 중단 또는 폐지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⑤ 영업 전부를 임대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그 상대방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8. 상법상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투표'라 한다)를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의 의결권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를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전자투표를 정한 경우,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감사를 전자투표로 선임하는 경우, 전자투표된 주식의 의결권수를 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수에 가산하고,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써만 그 선임을 결의하여야 한다.
- ⑤ 회사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전자적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고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 상법상 자본금이 10억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② 대표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③ 대표이사가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하기 위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또는 이사는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판례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거래한 경우, 그 거래상대방이 이사회 결의 부존재 사실을 경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는 무효이다.

20.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 ㄴ.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ㄷ. 회사의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지난 자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 ㅁ.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장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 ① ㄴ, ㄹ
- ②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ㅁ
- ⑤ ㄴ, ㄹ, ㅁ

2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인 A회사의 이사 甲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A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A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주주 전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A회사에 대하여 이자 약정이나 담보 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 ② 甲의 직계비속 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 ③ 甲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丙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A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 ④ 甲의 제3자 丁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A회사가 보증하는 경우
- ⑤ 甲이 B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지는 때에, B회사가 A회사와 거래하는 경우

22.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제할 수 없다.
- ③ 회사의 손해를 발생시킨 이사의 행위가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된 이사회도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④ 이사회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이사에겐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그 이사가 결의에 찬성한 사실을 회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기권하였다고 의사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이사가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23.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에서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악의를 소명하여 그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그 참가의 법적 성질은 공동소송참가에 해당한다.
- ④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24. 상법상 주식회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감사는 이사회 소집청구권을 갖는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야 하고,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감사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25.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않는다.
- ② 신주의 인수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이행을 한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 ③ 회사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신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 ⑤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에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6.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주식이전 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 ② 간이주식교환도 아니고 소규모 주식교환도 아닌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서를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경우, 상법상 다른 요건을 갖추더라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④ 주식이전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⑤ 주식교환무효의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27.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는 물론이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존속회사의 모회사주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 ③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인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④ 합병무효의 소는 합병의 등기가 있는 날로부터 6월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⑤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무효이므로,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는 합병무효의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28.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것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법에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의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 ②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은 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재무제표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상법상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이사는 정기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회계장부의 열람을 재판상 청구한 경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그 주식보유 요건이 계속 구비될 필요는 없다.

29.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자본금, 준비금, 배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②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는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④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⑤ 주식배당이 있을 경우, 주식의 등록질권자의 권리는 주주가 주식배당으로 받을 주식에 미친다.

30. 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社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 ③ 회사가 채권을 기명식에 한할 것을 정한 때에도, 사채권자가 기명식의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는 사채권자의 청구대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④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의 내용과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써 이를 정하여야 한다.
- ⑤ 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31. 상법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②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 ③ 청산인이 그 임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그 청산인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청산사무가 종료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감사가 있는 회사의 청산인은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4주간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 ②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채권자보호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 ③ 주주총회의 자본금감소 결의에 취소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극히 중대하여 자본금감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본금감소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자본금감소의 무효는 감자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다.
- ④ 감자무효의 판결은 대세적 효력과 불소급효가 있다.
- ⑤ 감자무효의 소는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자본금의 감소를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도 제기할 수 있으며,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가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33. 어음법상 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지급인도 아니고 발행인도 아닌 자가 환어음의 앞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 ② 본인 여부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명무인(記名拇印)도 유효한 배서가 된다.
- ③ 약속어음의 발행에 있어 발행인의 기명은 본명이어야 하고 아호나 예명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 ④ 대표이사 직인의 날인만 있으면 회사를 위하여 발행하였다는 뜻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는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 ⑤ 조합의 대표조합원이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서명하여 발행한 어음은 무효이다.

34. 어음법상 어음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금액에 이자가 붙는다는 약정 내용을 적은 경우 그 효력이 인정된다.
- ② 환어음의 금액을 글자와 숫자로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글자로 적은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 ③ 지급지가 제주도 서귀포시인데 지급장소는 국민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지점으로 된 약속어음은 지급장소 기재의 효력이 없으므로 어음 자체가 무효이다.
- ④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만기가 2022. 1. 10.인데 발행일이 2022. 2. 10.로 기재된 경우 그 어음은 무효이다.
- ⑤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35. 어음법상 환어음의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
- ② 만기에 지급을 받지 못한 소지인은 상환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액에 관하여 인수인에 대하여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
- ③ 환어음의 다른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기는 하지만,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④ 소지인은 인수를 위하여 제시한 어음을 지급인에게 교부할 필요가 없다.
- ⑤ 발행인이 인수를 위한 어음의 제시를 금지하더라도, 각 배서인은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인수를 위하여 어음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36. 어음법상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이견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어음행위의 능동대리에는 현명주의(顯名主義)가 엄격하게 적용된다.  
 ㄴ. 어음행위의 대리권을 부여하는 경우라도 내부적으로 그 대리권을 제한할 수 있다.  
 ㄷ.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ㄹ. 무권대리의 항변은 인적 항변 사유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 ⑤ ㄱ, ㄷ, ㄹ

37. 수표법상 수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인수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② 수표는 제3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없다.
- ③ 수표의 금액을 글자 또는 숫자로 중복하여 적은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으면 최대금액을 수표금액으로 한다.
- ④ 소지인출급의 수표에 배서한 자는 상환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 ⑤ 특정횡선은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일반횡선은 특정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8. 어음법상 환어음의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말소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 관하여는 배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② 배서에 조건을 붙이면 그 배서 자체가 무효로 된다.
- ③ 일부의 배서는 무효로 한다.
- ④ 배서인이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한 경우, 그 배서인은 어음의 그 후의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소지인에게 지급하라는 소지인출급의 배서는 백지식 배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39. 어음법상 어음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단순히 어음을 반환하는 것으로는 지급거절의 통지를 할 수 없다.
- ② 환어음의 소지인은 일부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
- ③ 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일람 후 정기출급의 환어음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 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명칭은 같으나 가치가 다른 통화로써 환어음의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지의 통화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0. 수표법상 수표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날짜를 적지 아니한 배서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이 작성되기 전 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하는 백지식 배서는 수표의 뒷면이나 보충지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③ 백지식 배서의 다음에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서를 한 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수표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발행인에 대하여 배서한 경우 그 발행인은 다시 수표에 배서할 수 없다.
- ⑤ 배서가 백지식인 경우에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수표를 교부만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각 문제의 보기 중에서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오.

(주어진 자료 이외의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으며, 조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할 것)

1.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등록의 명의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적 형식이 경제적 실질에 우선하므로 사업자등록의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으나 장부의 기록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전체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③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국가의 과세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세법의 해석이나 국제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합병으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우선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의 법정기일은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② 강제집행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③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해당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 ④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 ⑤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이다.
- ② 납세의무자가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 ③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 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5.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④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 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 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 세법개론

6.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신탁의 경우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 ③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증여자 자산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 ⑤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이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한도 없이 납세의무를 진다.
7.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② 거주자가 채권을 내국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자신의 보유기간 이자등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③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④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제외)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예금 또는 신탁계약의 중도 해지로 이미 지난 과세기간에 속하는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그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그 감액된 이자소득금액을 뺄 수 있다.

8. 거주자 갑(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음)의 2022년 이자소득 관련 자료이다. 소득세가 과세되는 이자소득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다.

- (1)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 5,000,000원
- (2) 2018년 5월 1일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2022년 5월 1일에 보험금을 만기 환급받았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① 보험금: 10,000,000원
  - ② 납입보험료: 8,000,000원
  - ③ 보험계약기간 중 보험계약에 의해 받은 배당금: 1,000,000원
- (3) 비영업대금의 이익: 2,000,000원
- (4) 계약의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 500,000원
- (5)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1,200,000원

- ① 8,000,000원      ② 9,000,000원      ③ 10,000,000원
- ④ 10,500,000원      ⑤ 11,200,000원

9. 거주자 갑의 2022년 기타소득 관련 자료이다.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이며, 기타소득의 실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 (1)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의 위약금: 4,000,000원
- (2) 고용관계 없이 받은 일시적인 외부 강연료: 3,000,000원
- (3)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 6,000,000원
- (4) 상표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1,000,000원
- (5) 주택입주 지체상금: 2,000,000원
- (6) 슬롯머신 당첨금품: 1,500,000원

- ① 1,200,000원      ② 1,600,000원      ③ 2,000,000원
- ④ 2,400,000원      ⑤ 6,000,000원

10. 거주자 갑(41세 남성이며 일용근로자 아님)의 2022년 근로소득 및 소득공제 관련 자료이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 (1) 근로소득 및 보험료 납부 내역
  - ① 기본급 및 상여금: 65,000,000원
  - ② 여비(실비변상정도의 금액): 1,200,000원
  - ③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3,000,000원(회사가 대신 부담)
  - ④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분: 4,000,000원
- (2) 부양가족 현황
  - ① 배우자(41세): 국내은행 예금이자 10,000,000원이 있음
  - ② 아들(11세): 장애인이며, 소득 없음
- (3)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총급여액-4,500만원)×5%

- ① 38,500,000원      ② 41,350,000원      ③ 42,490,000원
- ④ 42,850,000원      ⑤ 44,350,000원

1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한 공제대상 자녀(첫째)가 있는 경우 연 30만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의 대학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③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⑤ 사업소득(제조업)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세법개론

12. 거주자 갑의 2022년 연금소득 관련 자료이다. 연금소득금액으로 옳은 것은?

(1) 갑은 2022년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45,000,000원(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임)을 수령하였다.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내역

구분	연금보험료 납입 누계액	환산소득 누계액	연금보험료 납입월수
2001.12.31. 이전 납입기간	80,000,000원	100,000,000원	50개월
2002.1.1. 이후 납입기간	240,000,000원*	380,000,000원	200개월

\* 전액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음

(3) 연금소득공제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1,400만원 초과	630만원+(총연금액-1,400만원)×10%

- ① 25,475,000원      ② 27,162,500원      ③ 27,500,000원
- ④ 33,750,000원      ⑤ 35,625,000원

13. 거주자 갑의 2022년 의료비 관련 자료이다. 의료비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내역

구분	나이	금액	내역
본인	40세	600,000원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
배우자	38세	10,000,000원	난임시술비*
		2,000,000원	건강진단비
모친	63세	1,000,000원	건강증진용 보약 구입비
		1,500,000원	보청기 구입비
부친	70세	9,000,000원**	수술비 및 입원비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임  
\*\*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5,000,000원을 지급받음

(2) 갑(일용근로자 아남)의 총급여액은 120,000,000원이다.

- ① 3,660,000원      ② 3,675,000원      ③ 3,810,000원
- ④ 4,410,000원      ⑤ 4,425,000원

14.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한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②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의무가 없다.
- ③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④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15. 거주자 갑이 양도한 주택(등기된 국내 소재 주택임) 관련 자료이다. 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의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

구분	거래일자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	2022.8.8.	500,000,000원	400,000,000원
취득	1987.7.7.	불분명*	100,000,000원

\* 취득 당시의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도 확인되지 않음

(2) 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추가 지출 내역

내역	금액
자본적 지출*	120,000,000원
양도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0,000원

\*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지출한 비용임

(3) 주택의 필요경비 개선공제: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

- ① 170,000,000원      ② 270,000,000원      ③ 297,000,000원
- ④ 370,000,000원      ⑤ 372,000,000원

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조직변경일까지의 기간과 조직변경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로 한다.
- ⑤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7. 영리내국법인(주)A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 중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 ① 퇴직한 임원에게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②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원천징수하지 않음)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③ 임직원이 아닌 개인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지출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④ 추계로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발생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그 대납한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 ⑤ 임원에게 「법인세법」상 손금한도를 초과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2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인 건설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③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상환할 사채금액의 합계액에서 사채 발행가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를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3.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중소기업)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접대비 해당액은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였다.

- (1) 장부상 매출액은 15,000,000,000원으로 이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은 3,000,000,000원이다.
- (2)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중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은 90,000,000원으로 다음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 ① 전기에 접대가 이루어졌으나 당기 지급시점에 비용처리한 금액: 5,000,000원
  - ②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비: 20,000,000원
  - ③ 직원이 조직한 단체(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금액: 4,000,000원
  - ④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증정한 제품(원가 8,000,000원, 시가 10,000,000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접대비 9,000,000	(대) 제	품 8,000,000
		부가가치세예수금 1,000,000

(3) 수입금액에 관한 적용률

수입금액	적용률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000만원+(수입금액-100억원)×0.2%

- ① 2,280,000원
- ② 6,280,000원
- ③ 16,400,000원
- ④ 21,400,000원
- ⑤ 84,720,000원

24.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전기의 세무조정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1) 전기말 유보잔액 내역

내역	금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6,000,000원
외상매출금 대손부인액	15,000,000원*

\* 이 중 10,000,000원은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됨

(2) 당기 중 대손충당금 상계 내역

내역	금액
대여금*	8,000,000원
외상매출금	40,000,000원**

\* 특수관계인(영리내국법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함

\*\* 이 중 20,000,000원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였으나, 나머지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함

(3)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세무상 장부가액)

구분	금액
전기말	2,000,000,000원
당기말	2,500,000,000원

(4) 재무상태표상 당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50,000,000원이다.

- ① (+)12,500,000원
- ② (+)16,500,000원
- ③ (+)24,500,000원
- ④ (+)30,500,000원
- ⑤ (+)37,000,000원

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사택 임대 및 건설용역 제공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제22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사택 임대

- ① (주)A는 출자임원(소액주주 아님)인 갑에게 사택을 임대(임대기간: 2021.1.1.~2023.12.31.)하고 보증금 100,000,000원을 임대개시일에 수령하였으며, 약정에 의해 수령한 연간 임대료 총액 2,000,000원을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② 사택 제공에 대한 임대료의 시가는 불분명하나 사택의 시가는 400,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기에금이자율은 3%로 가정한다.

(2) 건설용역 제공

- ① (주)A는 특수관계인인 (주)B에게 건설용역(계약기간: 2022.3.1.~2022.10.31.)을 제공하고 받은 용역대가 240,000,000원을 매출로 계상하였으며, 해당 용역의 원가 200,000,000원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 ② 동 건설용역의 시가는 불분명하며, (주)A가 당기 중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유사용역의 매출액은 500,000,000원, 매출원가는 400,000,000원이다.

- ① 0원
- ② (+)1,000,000원
- ③ (+)7,000,000원
- ④ (+)11,000,000원
- ⑤ (+)17,000,000원

# 세법개론

26.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22기(2022.1.1.~2022.12.31.) 자료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1) 국내원천 소득금액은 292,000,000원이다.

(2) B국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내역

지분율	수입배당금	직접외국납부세액
40%	100,000,000원	10,000,000원

① 배당확정일은 2022년 3월 31일이며, (주)A는 자회사의 주식을 2021년 3월 1일에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다.

②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B국의 원천징수세액이며, 수입배당금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③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270,000,000원, 법인세액은 20,000,000원이다.

(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과세표준-2억원)×20%

- ① 8,000,000원      ② 10,000,000원      ③ 12,500,000원
- ④ 16,200,000원    ⑤ 18,000,000원

27. 법인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소득공제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 ②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③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에서 비과세소득, 이월결손금 및 소득공제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④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함에 따라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그 후의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다.
- 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의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를 한도로 공제한다.

28.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대가의 전액이 합병법인의 주식등이어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여야 한다는 것은 적격합병의 요건 중 하나이다.
- ④ 피합병법인의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⑤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29.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에 따라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⑤ 건축 장소는 국내에 2년간 존속하더라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0.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① 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잡힌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중고자동차를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③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물품을 증여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④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지만,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⑤ 사업자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3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외의 장소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②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이전 기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④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로 한다.

32. (주)A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니며,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2022년 1월 5일에 상품을 거래처에 인도하였다. 판매대금 중 10,000,000원은 인도일에 수령하였고, 나머지는 2월 5일부터 매월 5일에 5,000,000원씩 8회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기로 약정하였다. 판매대금 50,000,000원에는 할부이자 상당액인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2022년 2월 8일에 상품(취득가액 10,000,000원)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으로 반출(반출가액 12,000,000원)하였다.

(3) 2022년 4월 8일에 거래처에 인도할 예정인 상품의 판매대금 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2022년 3월 27일에 발급하고, 2022년 4월 1일에 당해 판매대금 전액을 회수하였다.

- ① 20,000,000원      ② 39,500,000원      ③ 62,500,000원
- ④ 63,000,000원      ⑤ 65,000,000원

33.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②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 ③ 사업자가 자기의 명의로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유상반출하는 경우는 영세율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은 대금수취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다.
- ⑤ 사업자가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3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주)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주)A의 임대건물(단층임)은 도시지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갑과 을에게 모두 2022년 4월 1일부터 3년간 다음과 같이 임대하고 있다.

구분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용도	면적	
				건물	부수토지
갑	1,000,000원	21,900,000원	주택	30㎡	750㎡
을	2,000,000원	43,800,000원	상가	30㎡	

\* 월임대료는 매월말 수령하기로 약정함

- (2)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5%로 가정한다.
- (3) 2022년 제1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물의 기준시가는 100,000,000원, 토지의 기준시가는 400,000,000원이다.

- ① 4,437,936원      ② 4,622,850원      ③ 5,362,506원
- ④ 6,533,628원      ⑤ 7,643,112원

3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자료이다.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인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할 금액으로 옳은 것은?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1) (주)A는 2021년 4월 15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300,000,000원에 구입하고,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였다.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

구분	과세사업	면세사업
2021년 제1기	60%	40%
2021년 제2기	56%	44%
2022년 제1기	50%	50%

- ① 1,500,000원      ② 1,530,000원      ③ 1,620,000원
- ④ 2,550,000원      ⑤ 2,700,000원

# 세법개론

36. 음식점업(과세유흥장소 아님)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갑의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이다. ㉠ 간이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차가감납부세액과 ㉡ 일반과세자로 보는 경우 2022년 제2기 납부(환급)세액으로 옳은 것은? 단, 세액은 지방소비세를 포함한 것으로 한다.

(1)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는 63,800,000원이며, 이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분 55,000,000원을 포함한 것이다.

(2) 매입 내역

구분	내역	금액*
계산서수취분	면세농산물 구입	5,450,000원
세금계산서수취분	기타 조리용품 구입	11,000,000원
	식당 인테리어 공사	41,800,000원

\*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3) 음식점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5%이고,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9/109이며,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4) 2022년 예정부과기간의 고지세액은 없었고, 전자신고방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 간이과세자 차가감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납부(환급)세액
①	0원	550,000원
②	0원	1,000,000원
③	70,000원	(-)550,000원
④	(-)475,000원	1,000,000원
⑤	(-)925,000원	(-)165,000원

37.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 사업자가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 예정신고·납부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하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하여 예정신고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한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9. 2022년 5월 2일에 사망한 거주자 갑의 상속세 관련 자료이다.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옳은 것은?

(1) 상속재산 내역

구분	금액	비고
주택	1,500,000,000원	-
생명보험금	505,000,000원	갑이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전액 납입함
반환일시금	100,000,000원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됨

(2) 사망 당시 갑의 공과금과 채무는 없고, 장례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3) 갑은 2020년 5월 2일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토지(증여 당시 가액 300,000,000원)를 증여하였고, 당해 자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400,000,000원이다.

① 2,000,000,000원    ② 2,005,000,000원    ③ 2,100,000,000원  
 ④ 2,300,000,000원    ⑤ 2,505,000,000원

40.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없다.
- 취득세 과세물건을 유상으로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책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